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www.unikorea.go.kr

발행처 통일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열린 정책입니다.

대선과정의 공약, 국정과제,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밝혔던 정책방향을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남북관계는 물론, 평화와 통일, 신경제지도 등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포괄적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참여와 열망 속에 출범한 정부답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과 함께 이 정책을 채워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이 같은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면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 참여 방법은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01 정책 배경	4 - 11
02 정책 비전	12 - 15
1. 평화 공존	
2. 공동 번영	
03 3대 목표	16 - 21
1.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2.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3.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04 4대 전략	22 - 27
1. 단계적 · 포괄적 접근	
2.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3.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4.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05 5대 원칙	28 - 31
1.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2.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3.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4.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5.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정책 배경



※ 한반도 형태의 이 지형은 임진강과 한탄강의 두 물줄기가 만나 형성된 지역으로, 경기도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01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01 정책 배경

세계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는 군사적 대치 속에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도발과 제재,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 ‘평화’ 최우선 추구

평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정의이며, 번영을 위한 토대입니다.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한이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고 통일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제재·압박을, 때로는 대화·협상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전을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남북간 상호 존중의 정신과 신뢰에 기반하여 북핵문제를 근원적·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정책 추진

우리는 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추구(3-No) 입장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3-No」는 1989년 이래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정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단계적·점진적 방식의 통일”을 추구합니다.

「3-No」 역시,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존중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북간 합의에 따른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01 정책 배경

정권이 교체되면 대북정책이 단절되고 남북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도 부침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통일문제,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참여하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 ‘일관성’과 ‘지속성’ 추구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존중하고, 계승할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국민협약(국내적 측면), △남북기본협정(남북관계 측면), △한반도 평화협정(국제적 측면)을 체결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로 점차 활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하나로 연결된다면,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과 주변국들간 경제적 이해가 증진된다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까지 아우르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질서를 창출해야 합니다.

■ ‘정책의 영역’을 동북아와 국제사회로 확장

정책의 범위를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 이웃국가와 국제사회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익을 넘어, 주변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01 정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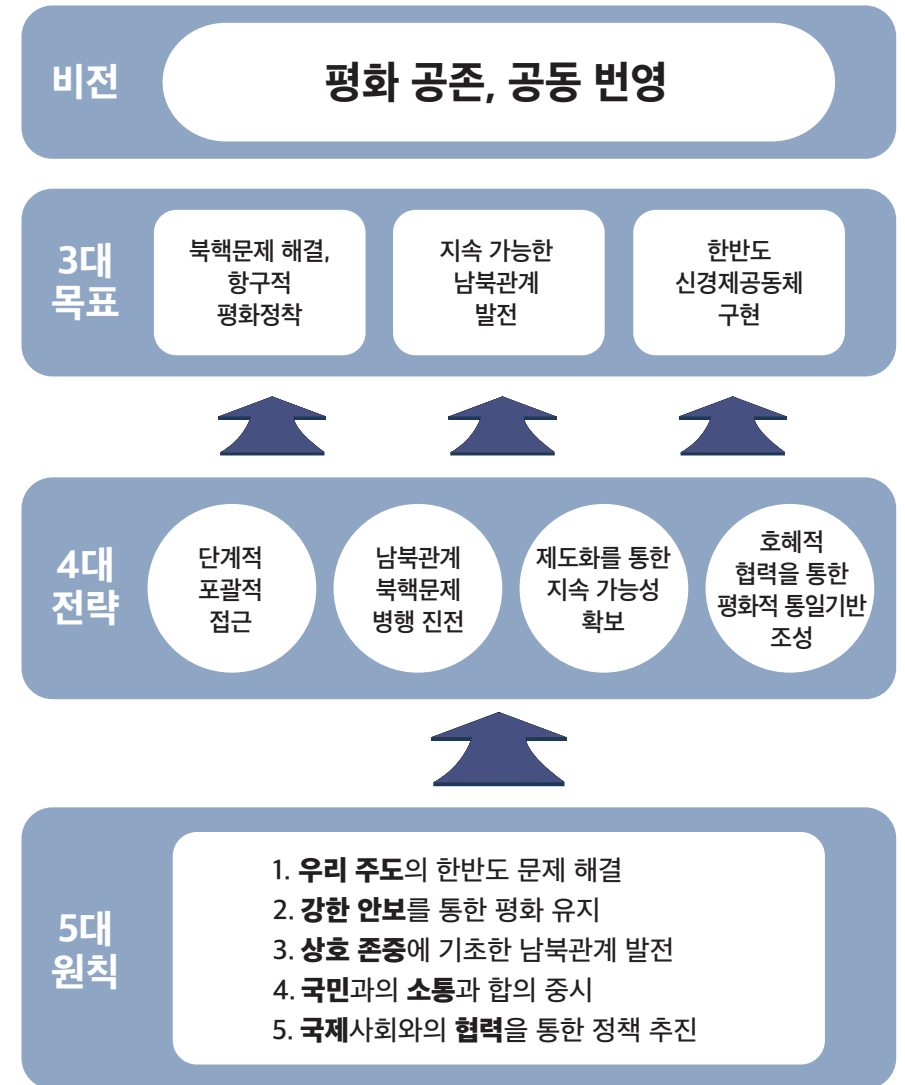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절실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2017. 7. 6. 독일 쾰른재단 초청연설)



정책 추진 체계도



정책 비전



02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1. 평화 공존
2. 공동 번영

02 정책 비전

1 평화 공존

평화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평화 공존’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자 비전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에는 대결과 긴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평화는 우리의 생존 문제이자 최고의 국익이며,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위한 토대입니다.

‘평화 공존’은 남과 북 주민 모두가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평화 공존’은 그 자체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남북간 평화를 제도화하여 서로에게 위협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면, 민족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2017. 8. 15.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

2 공동 번영

‘공동 번영’은 남과 북이 호혜적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지향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함과 동시에, 남북 주민 모두 혜택을 누리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협력의 범위를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 이웃국가로 확장한 ‘공동 번영’을 추구합니다.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하여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발전시켜 나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이웃국가도 함께 이익을 누리는 열린 번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관계 속에서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평화가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관계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 촉진시켜 나가하고자 합니다.

“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입니다.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17. 7. 6. 독일 쾰른재단 초청연설)

”

3대 목표



03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1.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2.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3.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03 3대 목표

1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써,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동적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제재와 대화의 병행 등 포괄적이고 과감한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60년 넘게 지속되어온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단순한 문서상의 합의를 넘어, 평화가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입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2017. 11. 1 국회 국정연설)



2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상호 존중·화해 협력·신뢰 증진 등 남북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간 합의는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간 합의를 법제화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제도적 자산으로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나갈 것입니다.

(2017. 6. 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



03 3대 목표

3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남북이 공존하며 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간 '상호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공동 번영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고, 경제통합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우리의 경제영역을 대륙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려나가겠습니다.

▶ 3대 경제벨트란?

- 환동해권 : 원산·함흥, 단천, 나선,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
- 환서해권 : 수도권,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벨트
- 접경지역 :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환경·관광벨트

남북한을 넘어, 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국가와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관련국과 실현 가능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북핵문제에 전환점이 마련되면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간, 동북아 국가들간 상호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자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나는 여러 차례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와 ‘신(新)북방경제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축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탕을 다져나가고, 다른 한 축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현할 때,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17. 9. 22.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4대 전략



04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1. 단계적·포괄적 접근
2.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3.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4.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04 4대 전략

1 단계적 · 포괄적 접근

북핵문제는 제재 ·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면서,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을 중단시키고,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면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핵동결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간 정치 ·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을 함께 협의하여, 안보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입니다.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습니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 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17. 7. 6. 독일 쾰른재단 초청연설)



2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 또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한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과거 남북 대화가 활발할 때 북핵문제의 진전을 이루고, 한반도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 1998년 금창리 의혹 발생시 우리의 구상을 미국에 전달, ‘페리 프로세스’에 참고
- √ 2005년 6자회담 교착 상황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9 · 19 공동성명 채택 기여
- √ 2007년 BDA 문제 대두시 우리측 평화체제 구상을 미국에 전달, 2 · 13 합의 체결 촉진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를 통해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대화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17. 8. 15.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04 4대 전략

3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통일문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분모를 더 넓혀감으로써, 논쟁과 갈등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간 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정부가 바뀌어도 약속이 지켜지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남북간 합의를 법제화하여,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환경에 맞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북한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견고한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간 적대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

안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자산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2017. 7. 6. 독일 코르베재단 초청연설)

”

4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경제 분야는 물론, 남북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산가족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통일의 상대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지방자치단체 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확대·장려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경제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남북 경제공동체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의 통일을 지향합니다.

남북이 공존공영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통일’을 추구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주민 모두가 나 자신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업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이자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2017. 7. 6. 독일 코르베재단 초청연설)

”

5대 원칙



05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1.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2.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3.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4.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5.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05 5대 원칙

1 우리 주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습니다.

개방과 협력에 바탕을 둔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분단은 냉전의 틀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2017. 8. 15.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2 강한 안보

확고한 한미동맹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평화 지키기’를 넘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등 ‘평화 만들기’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3 상호 존중

남북간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붕괴·흡수통일·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간 기존 합의를 계승·발전하고 호혜적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함께 번영하는 남북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4 국민 소통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함께 정책을 채우고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을 제도화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5 국제 협력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통해 이웃나라와 함께 번영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 속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크게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의견 참여 방법

-  1.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국민의견’ 코너에 의견 제시
-  2.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제안’ 코너에 의견 제시
-  3.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국민의견 담당자’ 앞으로 편지

지역과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